

특별회의[지역 재난위험경감관리에서의 인권_건설 환경을 중심으로]**재난위험경감관리와 강제이주**

2022. 10. 11.(화) 16:00-18:30

주관: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 기업과인권연구소(IHRB)

배경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지방정부는 기후 및 날씨 관련 재해 및 이로 인해 초래된 강제이주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특히 남반구의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보다 빈번 및 강력해지고 있다.

사망을 측면에서 이러한 재해의 영향을 결정하며, 병원, 물탱크, 주택 및 주요 생계 수단 또한 파괴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요인은 건설 환경 계획 당시의 위험 인식이다.

또한, 빈곤, 주변화, 안전한 토지와 주택의 부족 또는 인구의 모든 부문에 전달되지 않는(또는 이들에게 전파되지 않는) 조기 경보 시스템 역시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사망 및 심각한/장기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더욱이, 건설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건설 환경의 계획 및 관리를 둘러싼 결정 및 프로세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토지 이용 정책에서부터 계획 및 재정, 설계 및 건설, 철거 및 재개발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 및 건설 환경에 대한 기존 취약성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증대된다.

기존의 위험 및 IPCC의 최신 보고서에서 예측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생명권, 건강권 및 쉼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계획 설정 및 대응을 통한 위험경감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목표

1. 권리에 대한 고려 및 (최대한으로) 전체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지역 재해위험경감관리(DRRM)에 있어서의 전체론적 비전의 중요성을 지역 사례를 통해 설명
2. 전체 인구를 포함하고 위험 노출에 대한 다양한 정도와 요인을 고려하는 DRRM의 설정을 위해 도시 계획가와 건설 환경 주변 프로세스의 중요 역할을 지역 사례를 통해 설명

주요 논의사항

1. 재해로 인해 초래된 강제이주를 포함한 지역 DRRM의 인권 기반 접근
2. DRRM을 포함한 건설 환경의 지역 계획 설정 및 관리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

